

'민주성지' 이해 가지만 포화상태로 묻힐 자리 없는데…

광주시립묘지 '민주열사' 줄이어 난감

〈5·18 구묘역〉

화물연대 故 박종태씨 20일 안장 계획

허가없이 매장… 무등묘원 해마다 '흉역'

광주시립묘지를 관리하는 (재)광주무등묘원이 또 다시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시립묘지 전체가 포화상태인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숨진 인사들의 유족이나 관련 단체들이 '민주열사묘역'으로 불려온 제3묘역(5·18 구묘역) 안장을 고집하며 이들 둘러싼 갈등은 해마다 끄풀이되고 있다.

최근에는 화물연대 광주지부가 택배기사들의 복직과 노조탄압 종단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1지회 소속 고(故) 박종태 지회장의 시신을 20일 광주로 옮겨와 제3묘역에 매장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정권 타도'를 외치며 본신자살한 전북 전주 출신 고(故) 이병렬씨의 매장 문제를 놓고 한 차례 흉역을 치렀던 양측이 이번 일로 또 다시 충돌을 빚거나 않을까 우려된다.

16일 무등묘원과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시립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박 지회장 매장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 등은 "박 지회장의 시신을 시립묘지 내 민주열사묘역에 매장하겠다"고 말

했다. 하지만, 무등묘원 측은 묘지 조성공간이 남아 있지 않아 자리를 내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모두 4만45기(基)를 수용할 수 있는 광주시 북구 운정동 광주시립묘지에는 현재 3만6천 기가 안장돼 있다. 나머지 4천45기는 예약이 완료된 상

태다. 특히 40명의 민주열사 등의 시신이 안장된 제3묘역도 477기가 들어온 포화상태다.

이 같이 양측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마찰이 예상된다.

무등묘원은 지난해 6월 16일 이씨의 유가족 등이 시립묘지 내 민주열사의 묘에 시신을 매장하려고 하자 부족한 묘지 조성 공간과 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4조 매장의 대상) 등을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이씨의 유족 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민주열사묘역에 이씨

의 시신을 매장하자 1주일 뒤 서울 민족민주열사주묘기념단체에 '이장을 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마찰을 빚었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관계자는 "20일 대전 중앙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대전과 광주에서 노제를 지낸 뒤 박 지회장의 시신을 시립묘지 내 민주열사묘역에 매장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 아직까지 '장지(葬地)가 바뀌었다'는 집행부의 지침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자리 없어요" 포화상태가 된 광주시 북구 운정동 광주시립묘지 제3묘역(민주열사묘역). 화물연대측이 광주 1지회 소속 고(故) 박종태 지회장의 시신을 오는 20일 이 곳에 매장할 예정이어서 관리주체인 (재)광주무등묘원과 마찰을 빚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지원자 많고 공간은 없고 관리 어렵고…

5·18 구묘역, 매장 대상·'민주열사' 범위 뜨거운 논란

광주시립묘지 제3묘역(5·18 구묘역)에 자리한 이른바 '민주열사묘역'의 매장 대상과 '민주열사'의 범주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광주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상(제14조 매장의 대상) 공설 공동묘지인 광주시립묘지의 매장 대상은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 당시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망 전 거주를 목적으로

전(全) 세대가 전입(재등록 포함)한 때는 제외된다.

다시 말해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매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제3묘역에 매장된 시신은 모두 477기. 이 중 '민주열사'의 묘는 40기이다. 당초에는 80년 5·18항쟁 당시 산화했던 희생자들이 급조된 이 묘역에 묻혔다가 1997년 정부의 5·18묘역 성역화에 따라 국립5·18민주묘지로 이장됐다.

지금은 고(故) 이한열·강경대씨 등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물론 있으며, 일반시민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광주시민 외에 다른 지역 사망자도 매장돼 있는 점이다. 시립묘지를 관리하는 (재)광주무등묘원과 유족 간 자주 갈등을 빚는 이유다.

묘지 관리비도 문제다. 이 곳에 광주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망자가 묻힐 경우 관리 대상 명단에서 제외돼 인적사항 등이 기록에 남지 않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현재 무등묘원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묘는 모두 40기. 2002년 관련 조례 제정 후 묘지 관리비는 1년에 1만 원꼴이다. 40기가 지난 8년 간 체납한 관리비는 320만 원 무등묘원 관계자는 "민주열사묘역"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다른 지역 사망자도 이곳에 매장되길 바라는 유족들이 많은데, 공간도 없는데다 관리도 어려워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열사'의 인정기준과 범위도 논란거리다. 민주화운동 특성상 유공자라 할지라도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야 법률을 제정해 인정을 받는데다 열사라는 명칭 자체가 법률적 용어는 아니어서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애매한 티이다.

묘지 관리비도 문제다. 이 곳에 광주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망자가 묻힐 경우 관리 대상 명단에서 제외돼 인적사항 등이 기록에 남지 않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형사 '면죄부' 축구 코치

민사 책임 배상액 확대

불법행위 민사서 인정

법원이 지난 2003년 발생한 중학생 축구선수 의문사에 대해 죽구부 코치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한편, 교육 당국과 코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등 민사책임의 범위를 확대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선재성)는 16일 최모(사망 당시 14세)군의 유족이 전남도교육청과 도중학교 축구부 전 코치 강모(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1심 판결에서 지금 명령받은 액수에 1천600만원씩 더해 최씨 부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범위(50%)를 70%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아직까지 형사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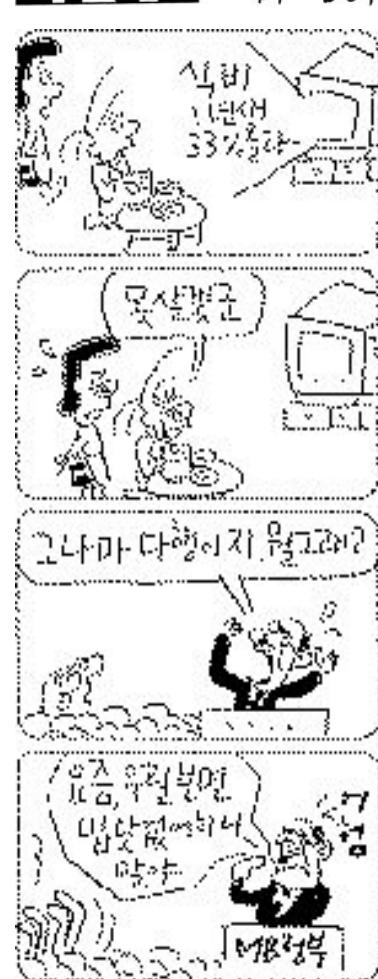
로 입증되지 않은 강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민사에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판결로 꼽힌다. 1심 재판부는 지도·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들어 코치인 강씨와 도교육청에 6천800여만원씩 지급하도록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정황으로 미뤄 강씨가 잠자는 최군을 깨워 속소 육상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최군은 폭행을 피하려고 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육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남의 한 중학교 축구선수였던 최군은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참가 차 제주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가 2003년 8월 22일 0시50분께 호텔 인근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내일침** 7831 김정우



백운산서 1주일새 산삼 2뿌리 '횡재'

○~50대 남성이
성남 팔
광양 백운산에서
1주일새 30여년
된 산삼과 80여년 된 산삼 2뿌리를 잇
따라 캐 화제.

○~16일 심마니 문유태(55·광주시
북구 운암동)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과 15일 광양시 백운산 자락



에서 약 30년과 80년 된 천종산삼(天種山參·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산삼)
2뿌리를 반경 100m 이내에서 발견
다는 것.

○~김씨는 "진귀한 난(蘭)을 캐는
꿈을 꾼 뒤 산을 찾았다가 하산하는
길에 산삼을 발견했다"며 "자세한 위치는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설명.

○~김씨는 또 "산삼 2뿌리를 자원
식물연구가에게 감정을 받은 결과 상
태가 양호하다는 감정서를 받았다"
며 "적절한 매입자가 나타난다면 산
삼을 팔 계획"이라며 싱글벙글.

/김경호기자 khh@kwangju.co.kr

화순 자살 여고생 집단 괴롭힘 사실로

경찰수사, 일부 확인

'화순의 한 여고생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화순경찰은 숨진 화순 모 교교 2년 K(17)양의 같은 반 친구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정확한 자살 동기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K양의 같은 반 친구인 A(17)양 등 4명을 불러 집단 따돌림과 폭행, 금품 카드를 빼앗아 먹여 만에 치러졌다.

를 벌여 일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특히 학교내 집단 따돌림과 폭력이 자신의 딸을 자살로 몰아넣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K양의 어머니 이모(46)씨 등 유족들도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또 K양이 숨지기 몇 시간 전 언니에게 보면 '2만원이 필요하다'며 속지기 대신에 먹여 만에 치러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